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 8. 13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경제 구현	1
II.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 양성 추진과제	4
III. 8대 선도사업 '19년 재정투자	12
IV. 향후 계획	16

I.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경제 구현

1 추진 배경

□ [현황 및 그간 대응] 우리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 혁신성장 추진

- (현황) 최근 우리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성장잠재력 약화
 - ① 주력산업 부진 + 규제혁신 지연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 * 규제환경지수(WIPO, '18): (싱가폴)98.6<1위> (미국)93.0 (일본)90.6 (한국)72.2<45위>
 - ② 생산인구 감소 + 획일적 교육시스템 下 창의인재 부족
 - * 생산가능인구(만명, 전년비): ('15)18.7 ('16)13.4 ('17)2.1 ('18.上)△6.1
 - * 국가 인재 경쟁력지수 순위(IMD, '17) : (한국)39 (홍콩)12 (싱가폴)13 (일본)31
- (대응)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서, 4대 정책방향과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며 혁신성장 정책 추진중

□ [향후 정책방향] 플랫폼 경제 구현 추진 + 선도사업 추가

- ① (플랫폼 경제)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
 - *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
→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 중요성 확대
 -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 투자가 어려운 측면 →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정부+민간) 필요
 - ⇒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시장에 명확한 시그널 제시) + 5년간 비전·중장기 목표 설정 + 핵심 프로젝트는 '19년 예산부터 투자
- ② (선도사업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를 기존 8대 선도사업에 추가
 - * “혁신성장에 필요한 추가 선도사업 지속 발굴 추진”(‘17.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 주도 + 정부는 비전 제시 및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환경 조성

2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 양성

□ 전략투자 분야 선정

[선정 기준]

- ① 지금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도태될 우려가 있는 분야
- ② 現경쟁력·기술수준 감안시 추가적 투자로 선도국가로 도약 가능
- ③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갖추어 경제구조·산업생태계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분야

[선정 경과]

-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 ⇒ ①데이터경제, ②인공지능(AI), ③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 및 공통분야(④혁신인재 양성)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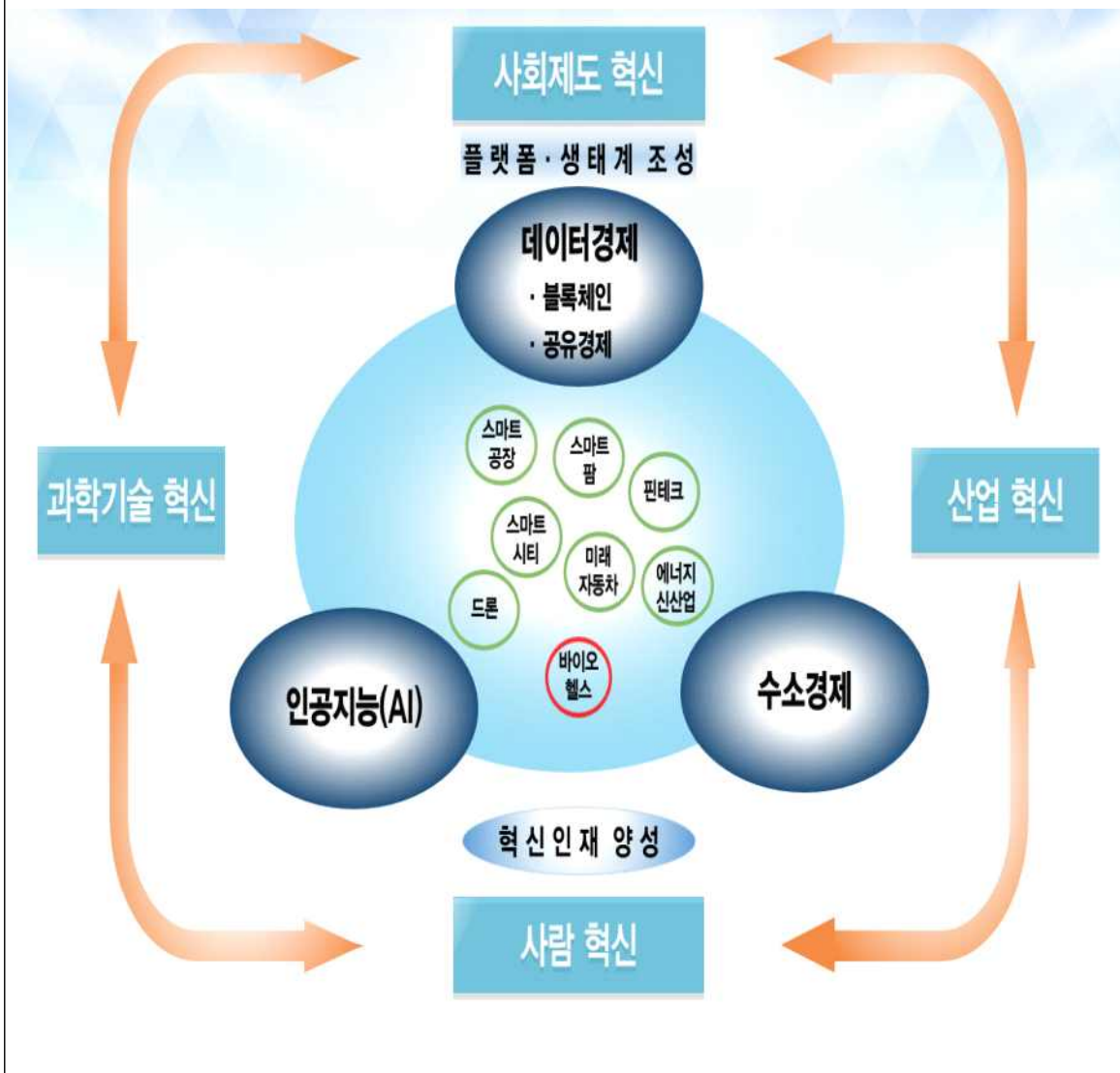
□ 3대 전략 투자분야 + 혁신인재 양성(공통분야) 핵심 내용

- ①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뢰성 제고 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공유경제 기반도 구축
- 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산업과의 연계로 고부가가치 新산업 창출
- ③ (수소경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
- ④ (공통분야: 혁신인재 양성)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고급 기술 보유 핵심인력 1만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

혁신성장 추진 체계

- ① (4대 정책방향)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과학 기술·산업 혁신과 함께 사람·사회제도 혁신도 추진
- ② (플랫폼·생태계 조성) 새로운 플랫폼 조성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 공통분야(핵심인재 양성)를 선정
- ③ (8대 선도사업)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 "초연결 지능화"는 플랫폼 경제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선도사업으로 추진



Ⅱ. 3대 전략투자 + 혁신인재 양성 추진과제

1~2. 데이터 · AI · 블록체인 · 공유경제

① 전략투자 분야 선정이유

- (의미와 트렌드) 데이터는 기존 생산요소(사람, 자본)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생산자원 + 新시장 창출 기반
- (現 주소와 희망) 폐쇄적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 표준화·접근성 제약으로 가치사슬 쏠 주기(축적, 유통, 활용)에서의 혁신 미흡
 - 양질의 데이터와 5G 등 우수한 IT 인프라와 블록체인 ·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하면 AI·데이터 산업 발전 잠재력이 큼

② 중장기 추진과제

- ① (축적) 활용 가능(machine readable)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대
 - 공공데이터(지자체 포함) 개방 확대 및 고도화 + AI 학습 데이터 구축 + 주요 데이터 정보(생산기관·내용·포맷 등) 제공 데이터맵 구축
- ② (유통) 데이터 유통기반(Big Data Network) 구축 + Data Divide 해소
 - 부문별(10개) 빅데이터 플랫폼 →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21년)
 - Data Divide 해소 · 공유경제 패키지*로 수요기반 확보
- ③ (활용)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 범용 AI 핵심기술 개발(지능형 반도체, AI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및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 '19년까지 주요 추진과제 >

- (축적)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데이터 맵 구축 + AI학습용 데이터 축적
- (유통)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구축 + Data Divide 해소 · 공유경제 패키지
- (활용) AI(지능형 반도체, 알고리즘, 양자컴퓨팅) 및 블록체인 기술개발 프로젝트

③ 핵심 프로젝트 ①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블록체인 기반구축

① (빅데이터 네트워크)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여 Big Data Network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분야별 데이터를 축적 및 가공(표준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10개소)

* 교통, 에너지 · 환경, 통신, 금융 부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조정('19년)

- (빅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거래 지원제도(거래표준, 품질관리 등)를 마련하여, 분야별 플랫폼을 연계한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21년)
- (제도개선) 빅데이터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18년)

② (AI 핵심기술) 대용량 · 고성능 컴퓨팅, 알고리즘 등 범용 AI R&D 투자 대폭 확대로 빅데이터 활용 최적화

- * ① 양자컴퓨팅: 범용 양자컴퓨터 개발 및 양자 컴퓨팅 연구기반 마련
- ② AI 알고리즘: 음성인식 · 언어이해 · 영상이해 · 학습판단 등 AI 기술 고도화
- ③ 지능형반도체: 인공지능 서비스에 최적화된 S/W, H/W가 융합된 반도체

③ (블록체인) 빅데이터 플랫폼 · 네트워크 구축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의 저장 · 보안성 제고 및 거래 신뢰성 확보

-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 민간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 추진('19년 20개 내외)

* (공공분야) 관세청 통관관리, 온라인 투표 등
(민간분야) 투명한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④ ('19년 재정투자) 1,900억원

(①빅데이터 네트워크 800억원 + ②AI핵심기술 800억원 + ③블록체인 300억원)

4 핵심 프로젝트 ② : Data Divide 해소 · 공유경제 패키지

① (Data Divide 해소)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 제공, 오픈랩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 · 활용성 제고

- (바우처) 중소기업 · 스타트업 등이 구매 · 가공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사업 창출 등 혁신 지원(공정 고도화, 마케팅 등)

* ① (구매 바우처)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등이 데이터 구매('19년 1,000개사)
② (가공 바우처) 스타트업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맞춤형 가공('19년 640개사)

- (오픈랩)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등에 빅데이터 + 알고리즘 + GPU 컴퓨팅 패키지 통합 지원('19년 200개사)

- (공공 Wi-fi) 전국민이 데이터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Wi-fi 존 확대('19년 약 30,000개)

* 시내버스, 도서벽지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설치

② (공유경제 기반구축)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 물류 · 업무공간 공유플랫폼 구축

- (온라인수출 플랫폼 활성화) 중소기업의 손쉬운 온라인 수출을 위한 공유 물류시스템 구축 및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제공

* 독립물 및 개방형 공유정보 시스템 구축, 물류집적 · 대행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온라인물 입점부터 통관,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지원

- (Co-working 플랫폼 구축) 중기 ·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 구축

* 국내외 공공부문 유희공간 및 민간(공유오피스) 연계 체계 마련

③ ('19년 재정투자) 1,300억원

(^①Data Divide 해소 1,000억원 + ^②공유경제 기반구축 300억원)

3. 수소 경제

① 전략투자 분야 선정이유

- (의미와 트렌드) 수소경제는 ①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②에너지 안보, ③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
 - 주요국은 CO₂ 저감, 전후방산업 창출* 등을 위해 장기플랜 下 수소경제 선점에 박차**
- * 연료전지 시장 4.1조엔('30년, 후지경제) 및 수소 연관산업 2.5조달러('50년, 맥킨지) 전망
- ** 日 : 수소기본전략 및 로드맵('17년), EU : 수소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추진
中 : 수소전기차 100만대 및 충전소 1,000기 건설 추진(~'30년)
- (現 주소와 희망) 수소차·연료전지 등 상용분야는 세계적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운송 등 생태계 조성 미흡 및 장기 로드맵 부재
 - 체계적 준비시, 상용기술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 위치 확보 가능

② 중장기 추진과제

- ① (생산)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 확보('23년)
 - 개질 기반 초기공급망 구축 + 수소생산 원천기술 확보*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연계한 친환경 수소 생산설비 조성 추진
- ② (저장·운송) 단기 유통체계 확립 →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
 - 적정가격 유통체계 마련* +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실증시설 설치
- * "수소 유통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전국 유사수준 가격체계 구현
- ③ (이용)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수소 이용체계 조성
 - 수소버스·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버스·차·열차·선박 등 개발 + 가정·건물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수소 발전소 확산 추진

< '19년까지 주요 추진과제 >

- (활용분야 확대) 수소버스 시범도입 및 생산기지 구축으로 초기시장 조성
- (기술확보) 친환경 생산 및 저장·운송(액화, 메탄화 등) R&D 시범사업
- (법·제도 기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반영('18.말) + '수소경제법' 제정

③ 핵심 프로젝트 ③ :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 ① (밸류체인별 R&D 실증) 밸류체인별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을 통해 친환경 생산, 고효율 저장·운송, 활용 다양화 등 수소 생태계 조성
- (생산) 수전해·광분해 등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개발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內 대규모 수소 생산설비 구축 추진
 - (저장·운송) 수소 액화·메탄화 등 고효율 저장·운송기술 개발 및 향후 실증을 위한 플랜트 설치
 - ※ '19년 예산에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15개 사업*을 반영하여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개발 추진
 - * (예)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산업부) 등
 - (활용) 수소차 外 버스, 열차, 선박, 기타 산업용 이동수단 등 개발 및 보급
 - 수소열차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22년), 수소선박·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19년)
 - 활용분야 확대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이 관련 부품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
- ② (생산거점 구축)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등 수소경제 수요 확충
- 주요 가스 공급거점 內 수소 생산기지 30기 구축('19년 3기)
 - 수소버스는 조기 양산체제를 갖추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요를 확충(5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운영 + 양산체제 구축 방안 구체화)
 - 수소생태계 조기 구현·확산을 위한 융복합 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초설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 ③ ('19년 재정투자) 1,000억원
(^①밸류체인별 R&D 실증 700억원 + ^②생산거점 구축 200억원)

4. [공통분야] 혁신인재 양성

① 혁신인재 양성의 중요성

- (의미와 트렌드) 획일적 교육시스템·창의적 인재부족 등으로 인해 AI·빅데이터·자율주행 등에서 선진국에 뒤쳐진 상황
 - * 美대비 격차('17년, 년): (AI)2.2 (빅데이터)1.7 (스마트카)1.5 (지능형로봇)1.3 (IoT)1.4
 - * AI 전문가(엘리먼트AI, 명): (美)3,017, (佛)237, (中)206, (日)204, (韓)21
- 최근 주요국들은 정부차원 혁신인재 양성책 마련과 함께 민간주도로 새로운 유형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 * (中)해외인재 유치(千人計劃), (日)해외인재유치종합대책(법무성 등 주도)
(佛)프로젝트 중심 에콜 42('13년), (美)자기주도적 교육의 미네르바大('14년)
- (現 주소와 희망) 강의·개인학습 ⇨ 프로젝트·팀 단위 협업·소통
 - 최근 민·관에서 모두 혁신적 교육을 도입·실시하고 있는 등,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
 - *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기주도형 학습(flipped learning) 확산 추세
 - ** 카카오·다음 등 1세대 벤처창업가들은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설립·운영중('16)

② 중장기 추진과제

- 혁신인재 양성과 기존 교육 시스템의 개혁 필요
 - 해외 유명연구소·학교·기업 등과 협력증진, 국내 교육기관 역량강화 등을 통해 AI 등 핵심부문의 인재를 충분히 양성
 -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적 도입·확산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전체 공교육 혁신도 추진
- ⇨ 배출된 우수인재가 핵심산업에 투입되고, 국내·해외인력이 활발히 파견·유입되는 교육생태계 구성

< '19년까지 주요 추진과제 >

- '19년 예산에 혁신 인재양성 및 인재양성기관 설립 반영 추진
- 각 부처 및 대기업·벤처기업,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③ 핵심 프로젝트 ④ :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① (1만 혁신인재 양성)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인재 1만명 신규 양성

* 연간 2,000명(해외 500명, 국내 1,500명)씩 5년간 총 1만명

- AI 등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유명연구소·기업·대학 등과 공동 프로젝트, 인턴십 실무과정 실시(연 500명)
- 국내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일반/전문대학원內 AI학과를 신설하고, 실무인재에 대한 산업맞춤형 교육 실시

* '19년 3개 AI학과 신설 및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 프로그램(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도입

②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現 교육시스템과 별도트랙인 혁신 교육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도입

* 에콜 42(프랑스) 등을 벤치마크하여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 마련

- 非학위과정으로 정부가 설립(가칭: Innovation Academy)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해외 유명 교육기관, 연구 기관·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초기에는 공모를 통해 민간 주관기관 선정 → 향후 비영리재단 법인화 검토

- 관련 부처, 대기업·벤처기업, 민간 교육전문가 등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18.下), 인재양성기관 설립 세부방안 등 마련
-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의 미래형 창업인재 등 혁신성장을 선도 하는 최고급 인재양성 추진(해외우수 인력 국내유치도 적극 추진)

③ ('19년 재정투자) '19년 900억원

(^①1만 혁신인재 양성 600억원 + ^②혁신프로그램 도입 300억원)

[참고] 전략투자분야(3+1) 및 4개 핵심 프로젝트 투자계획

- ◇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19년 예산에 1.5조원 투자
('18년 대비 +0.6조원, 71% 증)
→ 향후 5년간('19-'23) 9~10조원 투자 전망
- ◇ 4대 핵심 프로젝트, '19년 예산 0.5조원 투자('18 대비 +0.4조원 371% 증)
 - ①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 1,900억원
 - ②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1,300억원
 - ③ 밸류체인별 R&D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1,000억원
 - ④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900억원

(단위:억원)

프로젝트명	18년 (A)	'19년 (B)	증감 (B-A)	%
합계	8,700	14,900	6,200	71
①·②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5,799	10,400	4,600	79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①)	397	1,900	1,500	378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②)	68	1,300	1,200	1,765
③ 수소 경제	422	1,100	700	166
밸류체인별 R&D실증·및 생산거점 구축(③)	372	1,000	600	161
④ 혁신인재 양성	2,479	3,400	900	36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④)	240	900	700	292

Ⅲ. 8대 선도사업 '19년 재정투자

◇ 8대 선도사업에 '19년 총 3.5조원 재정투자
('18년 대비 +1.4조원, 62% 증)

①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자율주행차의 핵심 HW·SW 개발 및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 조성

* ('18) 5,907억원 → ('19안) 7,600억원 (+1,700억원, 29% 증)

-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율주행 SW로서 컴퓨팅, 인지·통신·판단 모듈 및 가속·조향·제동 등 차량 핵심부품 개발
-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수소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보조

* 전기차 충전기(1,070기), 수소차 충전소(30개소) 구축 예정

② [드론] 공공구매 대폭 확대 + 시험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

- 공공구매를 통한 초기시장 조성에 주력하고, 드론의 연구개발·안전검증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18) 698억원 → ('19안) 1,200억원 (+500억원, 72% 증)

- (공공분야 드론구매) 국방·산림·국토관리 등 공공분야의 드론 구매를 확대(900여대, 중앙부처)하고, 조달연계 기체 및 SW 개발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검증을 위한 시험비행장 5개소 및 실기시험장 구축

* 실기시험장 신규 구축을 통해 드론 조종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③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실증 + 설비구축 재정·금융 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전력생산 설비보급을 지원하고, 전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 등 수행

* ('18) 5,971억원 → ('19안) 8,700억원 (+2,800억원, 47% 증)

- (기반기술 개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태양광 설치 지원) 주택·건물·공공기관 및 농가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재정·금융 등을 통해 지원

* 주택 5.5→9.4만호, 609개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④ [바이오헬스] 바이오 융복합 R&D 지원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18) 2,718억원 → ('19안) 3,500억원 (+800억원, 29% 증)

- (정밀의료기술 R&D) 유전체 등 분자단위 분석을 통한 질환 발병원인 규명 분석연구 지원(3개 과제)
- (데이터 활용) 병원간 데이터 공유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7개 과제)하고, 정밀의료 코호트 시범사업* 추진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300~500명 대상으로 생체의료정보 수집모델 개발

⑤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지원 + 한국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

-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및 스마트화 수준 향상을 위한 R&D 지원

* ('18) 4,446억원 → ('19안) 10,300억원 (+5,900억원, 133% 증)

- (보급·고도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을 확대·내실화

* 스마트공장 도입(2,100→3,000개), 단가인상(보급 : 50→100백만원 고도화 : 100→150백만원)

- (협업패키지 기술 개발) 고도화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등 한국형 첨단모델 구현을 위한 패키지 R&D 투자

6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선도모델 개발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델 개발

* ('18) 767억원 → ('19안) 1,300억원 (+500억원, 65% 증)

- (스마트시티 확산) 세종·부산에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민간·지자체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입
-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존 도시(대구, 시흥)을 대상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 실증 모델 개발

* 교통, 안전, 도시행정 /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 서비스 제공

7 [스마트팜] 스마트 영농 혁신거점 조성 + 한국형 모델 개발

- 원예·축산·수산 분야 혁신거점 조성 통해 스마트 영농 확산

* ('18) 1,144억원 → ('19안) 2,400억원 (+1,300억원, 114% 증)

- (혁신거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 (기술개발) 국산화·표준화(12종), 적용 축종·품목(46종) 확대 및 현장 실증·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8 [핀테크]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 대국민 홍보행사 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참여 및 기술·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홍보·체험행사 개최

* ('18) 36억원 → ('19안) 100억원 (+60억원, 167% 증)

- (핀테크 육성·홍보)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및 맞춤형 육성프로그램 마련, 국민참여 핀테크행사(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개최 지원
- (핀테크 기반조성)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발굴

[참고] 8대 선도사업 '19년 재정투자 총괄표

◇ 8대 핵심 선도사업, '19년 예산 총 3.5조원 투자
('18 대비 +1.4조원, 62% 증)

(단위:억 원)

분야		18년 (A)	'19년 (B)	증감 (B-A)	%
합계		21,686	35,200	13,500	62
8대 선도사업	미래 자동차	5,907	7,600	1,700	29
	드론	698	1,200	500	72
	에너지 신산업	5,971	8,700	2,800	47
	바이오 헬스	2,718	3,500	800	29
	스마트 공장	4,446	10,300	5,900	133
	스마트 시티	767	1,300	500	65
	스마트 팜	1,144	2,400	1,300	114
	핀테크	36	100	60	167

IV. 향후 계획

□ '19년 주요 추진과제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 (~8월말)

○ 플랫폼 경제 및 8대 선도사업 분야 총 5조원* 반영

* (플랫폼 경제) 1.5조원 (8대 선도사업) 3.5조원

□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 마련(~12월말)

* ①데이터AI 경제(블록체인 등 포함 과기부) ②수소 경제(산업부) ③혁신인재 양성(과기부)

○ 주무부처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

* 관계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중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협업으로 추진

○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로드맵에 반영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야별 로드맵 순차 발표

< 전략투자 분야별 5개년 로드맵 주요내용(안) >

- ① 전략투자분야 선정 사유 및 중장기 목표
- ② 글로벌 트렌드 및 해외 정책사례
- ③ 우리나라 현주소 및 강점
- ④ 단기 정책과제 + 중장기 정책과제(5년간 할 일: 제도혁신 + 재정투자)
- ⑤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기대 효과

□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 '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 및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 조율